

명하고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가 탈핵 강연을 가졌다.

또 산업보건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이날 역학조사 설명회에 참석해 역학조사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공동소송모임은 2020년 11월13일 국회에서 열린 원전주변지역 피해주민 증언대회에 참여해 울진군민 147명이 진행하고 있는 갑상선암 공동소송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등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공동모임의 전간술 대표와 장시원 군의원이 참석했다.

울진지역 갑상선암 공동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울진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원전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양상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등 생활환경 저해 요소에 대해 역학조사 등을 통한 사실 규명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이다.

## 제4절 원자력산업과 지역사회의 변화<sup>108</sup>

### 1. 울진지역 변화의 원동력, 원자력발전소

울진지역이 원자력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면서 울진지역에는 급격한 변화의 희오리가 몰아친다. 당시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됐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원전부지로 확정된 북면과 인근 지역인 죽변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원전 건설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먼저 주민들의 전통적 생산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특히 이 같은 생산방식의 변화는 죽변항을 중심으로 발전한 어촌마을인 죽변면보다 농업 중심이었던 북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변화의 양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농사행위로만 가계를 꾸려오던 북면·죽변면 지역의 농민들에게 농외수입의 기회를 제공했다. 농사만으로 가계를 꾸려온 농민들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상시적으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종전의 경우, 농가가 현금을 만질 기회는 추곡 수매 때나, 혹은 토지나 키우던 소를 팔아야만 가능했던 일이었다.

농가가 상시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임노동

---

108. 원자력발전소와 지역사회 변화는 1979년 이후 1980년대 이르기까지 울진지역에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시행되면서 일어나는 사회, 경제적 변화양상에 초점을 맞춰 기술한다. 이 기간 사회정치적 갈등 양상은 앞의 '제1절 원자력산업과 반핵운동'편 참조

에 의한 수입이 보편화 되었다. 농민들은 농한기에 건설 현장에서 임노동으로 현금을 벌 수 있었다.

또 원전건설은 농가의 작물 식부체계를 변화시켰다. 물론 식부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직접적인 기제는 통일벼의 보급이었다. 1976년경 정착된 통일벼 재배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환전작물(換錢作物)의 재배를 크게 증가시켰다. 곧 통일벼 재배를 통한 논농사만으로도 식량을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전처럼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심은 보리나 서숙[조], 밀 대신에 콩·고추·마늘·배추·무 등을 심는 농가가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건설은 환전작물의 유통구조를 확대시켰다. 이는 전통시장인 흥부[부구] 시장의 기능과 규모를 크게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가의 아낙들은 환전작물을 장에 내다 팔아서 가계에 보탤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주택 임대수입 기회가 확산된 점이다. 원전건설로 외부인력이 대거 들어오면서 울진지역, 특히 북면, 죽변 일대는 주택난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원전 토목공사가 본격화된 1981년도 이후, 1일 평균 6,7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외부에서 유입된 인원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대거 유입된 건설인력들을 수용하기에는 울진지역의 주택공급률은 턱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북면·죽변 지역의 농어가는 앞다투어 빙방을 세놓거나 혀간이나, 마구간을 방으로 급개조하여 외부유입인구를 수용했다. 또 마당이나 텃밭에 블록이나 벽돌로 주거공간을 신축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렇게 만든 방을 세놓아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당시 임대료는 ‘잠만 자는 방[취사 시설이 없는 방]’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이었으며, ‘부엌이 달린 방’은 월 15만 원 수준이었다. 오늘날의 시세에 견주어도 결코 싼 경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울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다세대주택인 아파트가 처음 등장한다. 울진군에 아파트가 처음 선을 보인 시기는 1981년도이다. 울진읍내리에 신축된 코페아파트를 시작으로 울진읍의 성류아파트, 죽변 후정리에 신축된 동아사택, 삼우아파트를 비롯 북면 나곡리에 신축된 한전[현, 한수원사택]사택 등 32동이 신축됐으며, 714가구를 수용했다. 규모는 20평 미만이 558가구였으며 40평 이상이 156가구였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울진지역의 주거 양식을 대폭 변화시킨 셈이다. 다음은 원전 1·2호기 건설 기간 신축된 아파트 현황이다.

&lt;표 20&gt; 울진군 아파트 신축 현황(1981~1986)

연도	주관	동수	가구수	면적별가구수				
				15평미만	15-20평미만	20-30평미만	30-40평미만	40평이상
1981		32	714	-	558	-	-	156
1982		15	1,000	180	646	30	-	144
1983		5	124	40	20	48	16	-
1984		-	-	-	-	-	-	-
1985		7	186	186	-	-	-	-
1986		7	198	30	120	48	-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1981~1986)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두드러진 변화 중 또 하나는 소비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울진원전 1·2호기 건설공사는 1979년 6월, 원전부지에 개설되어 있던 7호선 국도 일부 구간 이설공사와 1979년 11월 용지매입을 시작으로 가시화되었다. 국도이설공사는 북면과 죽변면[당시 울진읍 죽변리]과의 경계인 북면 덕천리 소재 ‘내평교’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신화리를 경유, 부구리 소재 ‘부구교’로 연결하는 구간에 걸쳐 진행됐다. 기존의 7호선 국도가 관통지역인 덕천리[퇴천동·덕금동]일부지역과 부구리 염전동 마을 일대가 원전부지로 지정 고시 되었기 때문이었다.

국도이설공사는 공사 착수 1년 2개월여 만인 80년 9월에 마무리되었다. 이어 81년 2월에 울진원자력건설사무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지정지공사와 함께 상수도공사에 들어간다. 이어 같은 해 4월에 북면 주민리 소재 대수동 일대에 용수 및 상수도 취수댐 건설을 위한 취수댐 건조공사 착공식을 가진데 이어 북면 나곡리 만호골 일원에 외국인 아파트 및 사택단지 부대시설 착공에 들어간다. 이어 1982년 8월 덕천리 일대 해안에 호안 방파제 및 물 양장 축조공사가 착공되고 같은 해 10월 13일 비로소 원전건설 기공식을 가지면서 울진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또 이 무렵 원전건설 협력업체인 동아건설과 한국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이 본격적으로 북면과 죽변 일대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이와 때를 맞춰 이들 협력업체 소속 인력들이 거주 할 아파트와 연립주택 신축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원자력발전소 본 건물 시공을 맡은 동아건설은 죽변면 후정리에,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은 북면 부구2리에, 한국전력기술은 울진읍 읍내리에 대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당시 협력업체 소속으로 울진군에 유입된 인구는 다음과 같다.

&lt;표 21&gt; 원전 건설로 인한 울진지역 유입 인구 현황

연도/업체	한전(한수원)	동아건설	한국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검사개발
'81	63	2,640			
'82	104	8,352		6	67

출처 : 한수원(주), 2010, 『원자력발전30년사』

위 표에서 확인되듯 건설공사 도입기에 이미 원전건설에 따른 외부 인구가 1만여 명 이상이 상주하게 된다. 또 시행기관이나 협력업체 소속이 아닌 일반 건설노동자의 수까지 고려하면, 당시 외부 인구는 1만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구유입 수치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 왜냐면 이들 유입인구가 주민등록을 울진군으로 완전하게 이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유입인구는 ‘울진통계연보’ 등 공식적 통계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원전이 소재한 북면의 행정소재지인 부구리와 덕천리 마분동[현 신울진원전 예정부지]일대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식당과 간이주점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선다. 당시 새로 점포를 연 식당들은 대부분 국도이설공사와 주인리 취수댐건설공사 및 방파제 축조공사 등에 투입된 건설인력들을 위한 ‘함바집[현장 식당]’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유통구조의 변화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전통재래시장의 거래 물품의 변화를 가져왔다. 외부 유입인력이 대거 들어옴에 따라 주식인 미곡은 물론 부식장만에 필요한 다양한 엽채[과채]류의 생산, 유통이 활발해졌다. 때문에 원전 주변지역인 북면의 농가는 앞다투어 고추, 마늘 등 환전작물과 엽채류의 생산에 주력했다. 또 의류·신발·잡화 등 의식주와 관련된 생필품을 다루는 전문매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매식행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점과 주점이 대거 들어선 점이다. 특히 이들 식당과 주점은 전문화 경향을 띠며 확산됐다. 곧 육류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해물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비롯 건설노동자 계층을 위한 함바집[월식을 주로 하는 현장 간이식당] 형태의 식당 등이 그것이다. 이들 식당은 83년 이후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형화 추세로 변모한다. 전문식당의 대형화를 촉발한 것은 외부 상업자본의 유입이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 등이 연쇄점을 신설하면서 생필품 중심의 대형 유통 판매점도 앞다투어 들어섰다.

또 택시사업이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당구장, 게임방 따위의 성년용 위락시설이 대거 출현했다. 또 소규모 간이주점 형태가 절대부를 보유한 유흥주점으로 전환되는 것도 원전건설이 본격화된 1983년 무렵의 풍경이었다.

또한 1983년 이후 울진읍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이 하나 둘 선을 보이기 시작한다. 재래시장 등 난전 중심의 생필품 구입 방식에서 전문매장 중심의 전

문화·고급화 추세를 띠면서 도시 소비문화 형태로 진화한다. 안정적인 수입과 도시중심의 소비문화를 익힌 건설전문 인력과 그 가족들이 정주하면서 이들의 도시문화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가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북면 지역의 자연지를 대폭 변화시켰다.<sup>109</sup> 곧 북면의 지도를 바꾼 셈이다. 먼저 원전건설로 인해 4개의 마을이 수몰되거나 사라졌으며 도로 이설로 마을공동체가 인위적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원전건설로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은 덕천리의 퇴천동과 덕금동, 부구리의 염전동 그리고 주인리 대수동 등 4개 자연부락이다. 이들 4개 자연부락은 원전부지 매입이 종료되는 1983년 도에 동구(洞口)를 닫고 주민들은 울진읍, 부구리 등지로 집단이주를 하거나 멀리 부산이나 경주 등지로 이사를 갔다.

퇴천동과 덕금동 일대에는 원전 3·4·5·6호기가 들어섰으며, 염전동 마을에는 홍보전시관과 원전 1·2호기가 들어섰다. 또 주인리 대수동에는 원전용 공업용수와 한수원 사택 상수도 공급을 위한 취수댐이 들어섰다.

원전이 건설되기 전 염전동 마을은 ‘천일염 생산’과 ‘과수단지’로 이름 높았다. 또 동해연안에 자리한 퇴천동은 194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정어리, 명태, 쥐치와 함께 자연산 미역 생산지로 이름 높았다. 또 덕금동과 대수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며, 특히 대수동은 마늘과 한지생산지로 유명했다.

또 원전건설로 국도가 이설되면서 북면 신화리는 마을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분되는 기형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원전건설이 본격화 된 이후 늘어난 교통량으로 수십 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아있다.

이들 4개 마을이 원전부지로 확정되면서 1979년 11월부터 본격화된 부지 매입과정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울진지역의 이농현상은 타 농어촌지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듯하다. 물론 타 지역처럼 울진지역의 이농현상도 보편적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형 국책산업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이농을 둔화시킨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었음에도 이를 둘러싼 갈등양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의 원전부지 매입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부지매입은 울진군에 의해 진행됐다. 이는 관련법규인 전원개발특례법 상 ‘국책사업 부지매입의 경우, 해당 지역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109.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한수원(주)울진원자력본부, 2001,『도리깨질 끝나면 점심은 없다』

부지매입은 79년 11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지 외의 인근 주민들은 원전부지에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 대부분이 부지 매입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원전부지에 속한 부구리의 ‘염전동’, 덕천리의 ‘퇴천리’ ‘덕금리’와 공업용수 댐 조성지인 북면 주인리 ‘대수동’ 주민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하여 군 행정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한 뒤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집단이주했다. 집단이주지의 부지매입비는 해당자의 토지보상비에서 제했다. 다만 신화리 방면으로 국도가 이설되면서 도로 노선을 두고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당시 원전부지 매입을 담당했던 김정웅[현, 울진군 민원봉사 지적계장]의 증언이다.

부지매입은 3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1982년 11월, 취수댐이 들어선 대수동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끝으로 부지매입 작업이 완료됐다.

당시 집단이주를 요구한 지역은 염전동, 퇴천동, 대수동 등 3개 마을이었다. 이 중 염전동은 부구1리[현, 부구교 인근 달동네]로, 퇴천동은 덕천리[현 덕천 삼거리]로, 대수동은 울진읍 읍남리[현 울진경찰서 뒤편]로 집단이주했다. 덕금동은 부산, 경주 등 대도시로 개별 이주했다.

이처럼 당시 원전건설은 오늘날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갈등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당시의 정치·사회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당시의 정치구조는 ‘자립과 번영’이라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와 엘리트 중심의 관료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이 같은 정치구조는 한국전쟁을 거친 이후 반공이데올로기가 국가통치이념의 핵을 이루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절대적 권한을 발휘할 때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 주도 국책사업 결정과 이에 따른 토지수용의 방식은 이후 원전시설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양상을 띠며 표출된다. 특히 이들 갈등양상은 80년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촉발하는 이슈로 작용하면서 집단화·조직화 경향을 보이며 강화된다.

## 2. 에피소드 하나-덕천리 박00의 일년살이<sup>110</sup>

근대화와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1970년 말,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울진지역의 사회·경제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인 북면의 변화양

110. 아래의 글은 필자가 덕천리 민속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현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상은 타 지역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변화양상은 지역주민들의 의식주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그리고 뚜렷한 정후를 드러내며 전개되었다.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통일벼의 보급,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급격하게 변모하는 북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을 원전 인근 지역인 덕천리에 소재한 박00씨 가계의 일년 살이를 통해 살펴본다.

박씨가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고 있는 덕천리는 반농반어의 전형적인 해촌[여기서 해촌은 '반농반어의 생업적 특징'을 지닌 점에서 '어업만을 전업으로 가계를 꾸리는 어촌'과 구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마을이다.

1972년도 덕천리의 인구는 545명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1972년 덕천리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퇴천동[퇴내]에 25가구, 덕금마을에 24가구, 마분마을에 46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95가구에 545명[남자 290명, 여자 255명]이 거주했다. 또 가구 당 최소 2~3명에서 많게는 10~11명이상이 살았으며, 가구 당 평균 가족 수는 8~9명으로 집계된다.

2차산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들어서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출이 본격화되던 1974년에서 1976년 무렵 덕천리의 인구는 250여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젊은층이 대거 농촌을 떠나 도시 임노동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던 1979년도에 덕천리 '덕금마을'이 원전부지로 편입되면서 이곳의 주민들이 부산이나 경주 등지로 이주를 하여 일부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원전건설로 타지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덕천리 인구는 대폭 늘어나 3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원자력발전소 토목건설이 시작된 1981년도의 덕천리 인구는 75가구에 372명으로 증가했으며 울진원전 1·2호기 완성단계인 1987년도에는 125가구에 487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당시의 타 지역 농어촌이 지속적인 탈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음에 반해 덕천리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어촌 인구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현상은 덕천리가 속해 있는 북면의 인구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0년 당시 북면의 인구는 8,268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4,148명, 여자가 4,120명이었다. 또 당시의 세대수는 1,763세대였다. 또 1981년도의 경우, 1,879가구에 8,985명으로 증가했으며 1987년도에는 3,163가구에 12,010명으로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lt;표 22&gt; 1974~1987년의 울진군 전체 및 북면 인구 변화 현황

연도/지역	울진군		북면		(죽변 포함)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1974	19,216	109,503	1,833	10,622	2,254	12,520
1980	19,345	90,782	1,763	8,268		
1981	18,938	89,865	1,879	8,985	2,093	10,026
1987	21,951	83,852	3,163	12,010	3,039	11,462

출처 : 울진군,『울진통계연보』

박씨의 가계는 덕천리 마을에서는 중상위층에 속하는 규모였으며 반농반어적 생업특성을 지니고 있다. 원전건설이 본격화되던 1979년경, 박씨의 식구는 모두 7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이었다. 농지규모는 논 4필지, 밭 5필지였으며, 한우 1두, 디딜방아를 보유한 정미소를 보유했으며 가옥은 20평 규모의 목조가옥이었다. 새마을운동으로 지붕을 함석으로 개조하기 전에는 초가지붕이었다. 또 17자짜리 덧마선 1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덧마선은 뜻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 움직이는 무동력선이며 ‘풍선(風船)’이라고 불렸다.

덧마선 조업은 주로 봄과 가을에 이뤄졌다. 가을에서 초겨울까지는 주로 문어바리[잡이]를 했으며, 봄과 가을에는 주로 그물과 자망으로 가자미, 열기, 새치[이면수] 따위를 잡았다. 조업은 3명으로 진행되며, 선주는 고기를 팔아 선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1970년 초까지 박씨는 주로 나락[벼], 보리, 서숙[조], 콩을 경작했으며, 감자, 고추, 마늘 등을 조금씩 가꾸었다. 1974년 정부에서 통일 벼씨를 생산하고, 이의 보급과 정착이 마무리 되는 1976년경, 농작물 식부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통일벼의 보급 이전에는 대가족 구조를 이루고 있는 가족들의 식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나락과 보리, 서숙 등 식량곡물 위주로 재배해야만 했다. 그러나 통일벼가 정착한 1976년 이후부터는 논농사만으로도 식량충족이 가능해졌으므로, 밭에는 주로 환전(換錢)작물인 고추와 콩, 야채류를 대거 경작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무렵에는 식구들 중 2명이 이미 도시로 나간 이후였다.

평생을 덕천리 마을에 살면서 반농반어의 생활을 꾸려온 박씨의 삶은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기 전 울진지역의 해촌 마을의 생업 특성을 잘 보여준다.

박씨의 일 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노동의 연속이었다. 해사(海事)[바다일]는 주로 봄, 가을철에 이뤄졌지만, 농사일은 때를 맞춰야 하는 일이어서 해사가 없는 날에는 늘 농사일에 매달렸다. 특히 해사가 있는 봄, 가을철의 농사일은 아낙들의 몫이었다.

해사가 있는 날이면 새벽 2~3시에 일어나 간단하게 요기를 한 뒤 도시락을 싸들고 덧마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 덧마선으로 한 시간쯤 걸리는 곳에 어장이 있었다. 어장에 도착하여 미리 쳐 놓은 그물을 걷었다. 그물을 걷고 나서야 비로소 배 안에서 아침을 먹는다. 아침밥

은, 집에서 가져 온 쌀로 밥을 짓고 갓 잡은 고기를 끓이거나 회로 장만하여 해결했다. 오후에는 그물을 보수하고 다음 날 새벽에 칠 그물을 손질하고 나면 해가 저물었다.

아내는 남편이 잡아 온 고기를 갈무리하여 5리쯤 떨어진 죽변장으로 이고 가서 고기를 팔았다. 고기를 다 팔고 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잠시도 쉴 틈 없이 밭으로 나갔다. 해사일이 많은 봄철이나 가을철의 농사일은 모두 여자들의 몫이었다.

일 년 내내 쉴 틈 없이 바쁜 일상이었지만, 해사와 농사일을 겸한 집에서는 농사일만 하는 집에 비해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매일매일 고기를 팔아 현금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사일만 하는 집에서는 현금을 만지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쌀을 내다 팔지 않으면 좀처럼 현금을 만질 수 없었다. 당시는 식구가 먹을 양식도 태부족했던 터라 쌀을 내다 파는 일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박씨의 가계에 여유가 생긴 것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된 1981년 이후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될 무렵, 평생 식구들을 먹여 살리던 덧마선을 처분했다. 무동력선으로는 생산이 적어 선원들의 임금도 맞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 무렵 선원들이 죽변항으로 나가 대형 정치망 어선에 취직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된 1982년경부터 마을은 외부에서 들어 온 건설인력들로 북적댔다. 마침 마을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후문에 닿아있는 터여서 많은 사람이 마을 앞을 거쳐 공사 현장으로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대거 건설인력이 몰려든 당시 북면 지역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북면 지역주민들은 앞다투어 빙방을 세놓고 헛간을 고쳐 숙소로 개조했다. 덕천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씨는 마당에 방 두 칸을 꾸미고, 텃밭에 블록집을 신축하여 세를 놓았다. 당시 방세는 ‘부엌 없는 방’은 월 10만 원, ‘부엌 있는 방’은 15만 원 수준이었다. 이 같은 시세는 당시 군청 소재지인 울진읍의 방세보다 비싼 편이었다. 또 농사일이 뜸해지는 농한기에는 원전건설 현장에서 품을 팔았다. 아내는 마을에 들어선 대형 식당에서 품을 팔았다. 아내가 식당에서 설거지 등 허드렛일을 하고 별어들이는 임금은 월 60~80여만 원가량이었다.

또 논농사만으로도 식량이 충족되자 이제는 밭에는 보리나 서숙, 밀 따위를 심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에 고추나 콩, 배추, 양배추, 미나리, 무 등을 심었다. 이렇게 심은 고추나 마늘, 잎채소류는 마을에 들어선 식당에 팔았다. 정기적인 납품처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번 돈으로 4명의 자녀 모두를 상급 학교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현금을 쉽게 만질 수 있게 되자 먹을거리와 입성 거리가 달라졌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식구들이 끼니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었는데, 도시산업화와 통일벼 보급으로 식량 난이 해결된 데 이어 원전이 들어오면서 식단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부터 식구들은 돼지고기는 물론 소고기도 가끔 먹을 수 있었다. 어렵게 구하던 설탕이나 미원 등 조미료도 듬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양념류가 풍족해지면서 일상식의 기본 밑반찬인 김장 맛

에 변화가 왔다. 젓국물과 부족한 소금과 마늘, 고춧가루만으로 담그던 김장에 생선·파·당근·생강·미나리·갓 등 갖은 채소와 설탕, 미원, 마늘, 고춧가루 등을 넉넉하게 넣을 수 있게 되면서 맛도 훨씬 깊어지고 음식 빛깔도 맛깔스러워졌다.

또 아이들은 통닭이나 라면 등 간식거리도 종종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살림살이에 여유가 생기자 저축도 할 수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생길 때 거기 다녔지. 발전소 생기니까 나았지. 거기 다니면서 돈을 버니까 반찬도 사 먹게 되고 그러지. 돼지고기 소고기도 사 먹고 하지. 그전에야 사 먹을 수가 있나. 모십기나 하고 해야 육개장도 끓여 먹고 하지. 특별한 날 아니면 못 먹어. 시아바이 생일 때는 그래도, 미역국에 소고기 넣고 끓이지. 집에서는 못 해 먹지. 원자력 들어왔을 때, 식구가 일곱 됐지. 월급 받아 돼지고기를 서너 근 사 오면 김치 넣고 두루 치기도 하고, 볶아서 쌈도 싸 먹고. 쌈은 배춧잎이나 상추 싸 먹어. 옛날에는 돼지고기가 쌌어. 한 근에 3천 원, 4천 원 했지. 소고기는 미역국도 끓이고, 토란 넣고 육개장 끓이고 했지. 생고기로 꼬 먹는 것은 한 삼사 년 되나. 아들이 집에 오면 식당에 가서 꼬 먹기도 하고,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식구끼리 둘러앉아 꼬 먹기도 하고.

박씨 아내의 기억처럼 원전건설은 울진지역, 특히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일거에 변모시켰다.

원전건설이 본격화될 무렵 설치된 마을 간이상수도는 부엌 개량을 앞당겼다. 부엌 개량은 여자들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마분 마을에서 부엌 개량은 두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원전건설이 시작되던 1979년경에 ‘마을 간이상수도’가 설치되면서 일부 가구에서는 땔감을 이용하던 전통 부엌을 연탄을 때는 아궁이로 개조했다. 그러나 이 무렵 마분 마을에서 연탄 아궁이로 개조한 집은 전체 가구의 10% 수준이었다. 이는 울진읍이나 죽변 등 읍면 소재지의 가구가 1970년대 초에 연탄 아궁이를 갖춘 부엌으로 개조한 데 비해 10여 년이나 늦은 것이었다. 연탄 아궁이 부엌으로 개조하자 점심때도 따뜻한 찌개나 국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로 부엌이 개량된 시기는 1988년 무렵이다. 입식 부엌으로 대폭 개조가 이루어진 것은 난방과 취사용 연료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난방과 취사용 연료의 변화는 가옥 구조를 대폭 개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옥 난방과 취사를 위해서는 기름보일러와 가스 조리대를 갖춘 주방을 설치해야 했으므로, 가옥을 전면적으로 개조해야만 했다. 특히 입식 부엌은 종전의 부엌 구조로는 설치할 수 없었으므로, 정지를 둑우어 방처럼 꾸민 뒤 설치해야 했다.

입식 부엌이 설치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량은 종전의 그것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모든 가사노동이 대부분 집안에서 가능해졌다. 특히 물과 연료를 필요할 때마다 언제

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올 때도 쉽게 차를 끓여 대접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수월해진 것은 ‘설거지’였다. 가구 대부분에서는 입식 부엌을 설치하면서 기름 보일러도 함께 설치했기 때문에 온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겨울철에도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었다.

원자력 2호기 지을 때 일 나갔어. 주로 청소하고 못도 빼고, 하루에 일당 만 이천 원 인가 받았어. 농사철에는 일 안 나가고, 농사철 끝나면 일하러 가. 원자력 3·4호기 지을 때는 동네에 생긴 길송식당에서 일했어. 원자력 냉기는 사람들이 그때 한 100명 넘게 식당에서 자고 밥 먹고 했어. 식당 다닐 때는 주로 밥도 하고 설거지하고. 그때는 월급제로 했는데, 처음에는 60만 원 받다가 뒤에 80만 원도 받아. 지금은 일 못댕겨, 나이가 많아서. 원자력 처음 지을 때는 젊었을 때니까. 우리 마실 사람들 많이 댕겼어. 원자력도 댕기고, 식당도 댕기고. 원자력 들어서고 돈 구경했어.

20세에 북면 상당리에서 덕천리로 시집와서 평생을 살고 있는 임정숙[67, 덕천리 159-2] 할머니도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기억한다. ‘원자력 들어서고 돈 구경했어’라는 임정숙 할머니의 기억은, 비단 임정숙 할머니에게 국한된 생각이 아니라, 당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보편적 인식이자 변화의 구체물이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용적 실체인 셈이다.

### 3.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도시산업화와 통일 볍씨의 보급으로 보릿고개가 사라질 무렵 본격화된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지역사회구조는 물론 지역경제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를 변화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다. 또 원자력발전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동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전건설은 먼저 현격히 감소하고 있던 울진지역의 인구 유출을 둔화시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도시산업화에 따른 인구 유출 현상은 전국의 농어촌에 보편적으로 드러난 현상이었지만, 울진군, 특히 북면, 죽변면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외부로부터 건설인력 등 전문인력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울진지역의 소비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를 유입인구는 울진지역의 소비경제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또 당시 한전 등 유수의 기업에 소속된 전문인력과 그 가족들이 대거 정주하면서 소비 형태가 전문화·다양화되었음은 물론 고급화의 경향을 띠면서 확대·강화되었다.

원전건설이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은 크게 여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세 제법,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방재정 증대 효과는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효과이며, 외부인력의 유입,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소비경제 증대, 지역민 고용 증가 효과, 인구 밀집 형 도시화에 따른 자영업 집중 등은 대형 국책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원자력발전소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들어서면서 지방세의 증대를 가져왔다. 가장 기본적인 취득세 등을 비롯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등 울진군 지방세를 증대시켰다. 또 2005년 지역개발세에 원전건설사업분야가 포함되면서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났다. 2005년 12월에 재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원전 소재 지자체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원전개발세는 건설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동 원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원전개발세는 2006년 1월을 기점으로 가동하고 있는 원전에 부과되며 해당 연도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KW당 0.5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른 전액이 울진군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액수의 65%만이 울진군 세수입으로 들어온다. 나머지 35%는 경북도의 몫이다. 이 법이 처음 적용된 2006년도의 개발세 총액은 158억 원이었으며, 2007년에는 160억 원이다[이 수치는 6호기 가동에 따른 총액의 65% 규모임].

다음은 울진원자력본부가 울진군 지자체에 납부한 지방세 납입현황이다.

<표 23> 울진원자력본부의 지방세 납부 실적(1998~2006)

(단위 : 천만 원)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원전지방세 납부 실적	103.8	186.1	123.6	51.3	94.4	120.7	241.3	320.1	371.6
울진군 지방 세 총 수입	233.6	294.0	224.0	227.0	293.0	320.4	433.5	409.3	404.8
비율(%)	44.4	63.3	55.2	22.6	32.2	37.7	55.7	78.2	91.7

이 분야는 원전을 비롯한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법률'이 처음 만들어진 1989년 이후의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였다.

두 번째는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하 발지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이다. 발지법의 시행 배경에는 1980년 후반 이후 표출되기 시작한 원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또 원전 후속기 건설 부지를 쉽게 확보하려는 다중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울진지역의 경우, 원전 후속기 건설이 지속해서 추진되면서 발지법의 비현실성에 대한 갈등 또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1990년 1월 처음 시행한 발지법은 전력산업구조개편, 비현실성, 반효율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8차에 걸쳐 개정된다.

발지법은 1995년 1월 법령 개정을 통해 △ 지원사업 재원은 한전 출연금 △ 규모는 지자체 난해의 전력판매수익금의 0.08% △ 주변 지역 전기보조금 조항 신설 등을 규정했다. 지원금의 성격을 사업자인 한전의 출연금으로 규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97년 10월에 있은 4차 개정은 △ 지원요율 0.08%를 0.12%로 상향 조정 △ 방폐물처분장 지원사업 신설 △ 특별지원금제도 신설 △ 지원금 조기가용 근거 마련 △ 민간환경감시 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개정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자 울진군 자체와 정부, 한전 간에 ‘특별지원금 139억 원 지급’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야기된다. 울진군은 개정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 적용 대상인 울진원전 3·4호기 해당 분 139억 원[1997년 10월~12월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한전은 후속기[울진원전 5·6호기]연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지연한 다툼’이 그 것이다. 결국, 1997년분 원전특별지원금은 울진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과정이 모두 해소되고 신울진원전부지 문제가 일단락된 2000년 이후에 지급됐다.

이어 2000년 12월 6차 개정을 통해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 △ 사업자 출연금 폐지 △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부담[전기사업법으로 규정]으로 규정했다. 당시 개정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확정되면서 한전의 전력산업 독점구조가 해체된 데 따른 것이었다.

또 2005년 7월, 8차 개정을 통해 △ 지원사업 종류 통합 △ 사업자지원사업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8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발지법이 규정한 주요 특징은 △ 기금은 전기사용자에 의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발전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조성 △ 전력산업기금 조성 분은 자체장이, 사업자 출연금 조성 분은 해당 원전본부장이 각각 집행 △ 일반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의 적용 범위 확대[당해 자체 전역] 등이다.

1990년 1월부터 시행된 발지법에 따라 울진군에 지원된 지원사업의 총량은 2007년 말 현재, 특별지원금 64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72억 원이다.

<표 24>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실적(1990~2007)

(단위 : 천원)

구분	소득 증대	공공 시설	육영 사업	주민 복지	기업 유치	전기 보조	홍보 사업	부대 사업	환경 감시	소계	특별지원 사업	총계
1990	265,920	485,880	75,000				25,000	900		852,700		852,700
1991	232,800	469,000	125,000				28,100	900		855,800		855,800
1992	230,000	645,000	125,000				43,000	1,200		1,044,200		1,044,200
1993	646,000	1,016,043	437,957				44,001	1,200		2,145,201		2,145,201
1994	495,000	1,173,950	431,050				45,000	1,300		2,146,300		2,146,300

구분	소득 증대	공공 시설	육영 사업	주민 복지	기업 유치	전기 보조	홍보 사업	부대 사업	환경 감시	소계	특별지원 사업	총계
1995	540,000	1,122,000	438,000			165,290	45,000	1,300		2,311,590		2,311,590
1996	431,100	2,432,540	790,000	200,000	300,000	478,764	55,000	9,350		4,696,754		4,696,754
1997	936,000	1,539,000	1,077,000	200,000	300,000	453,407	155,000	9,350	370,000	5,039,757		5,039,757
1998	815,000	4,953,000	2,622,000	200,000	300,000	467,902	204,800	9,350	294,100	9,866,152		9,866,152
1999	1,370,000	2,893,000	1,827,000	200,000	300,000	701,000	175,000	10,300		7,476,300	16,700,000	24,176,300
2000	1,567,500	1,609,000	1,933,500	200,000	300,000	714,000	150,000	15,250	385,900	6,875,150		6,875,150
2001	1,659,000	1,407,000	2,044,000		300,000	2,519,170	200,262	20,700		8,150,132	46,300,000	54,450,132
2002	1,249,000	1,817,000	2,044,000		300,000	1,094,460	140,000	20,700		6,665,160	1,700,000	8,365,160
2003	542,870	2,523,130	2,044,000		300,000	1,181,208	94,000	20,000	90,102	6,795,310		6,795,310
2004	455,000	2,317,000	1,848,000		300,000	1,186,900	125,000	13,100	338,457	6,583,457		6,583,457
2005	1,131,354	1,234,646	1,274,000		300,000	901,000	70,000	11,300	411,000	5,333,300		5,333,300
2006	596,200	7,594,260	2,000,000			1,617,540		10,000	806,300	12,624,300		12,624,300
2007	423,752	7,057,248	2,493,000			1,617,000		8,000	521,700	12,120,700	62,000	12,182,700
합계	13,586,496	42,288,697	23,628,507	1,000,000	3,000,000	13,097,641	1,599,163	164,200	3,217,559	101,582,263	64,762,000	166,344,263

출처 : 한울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실적』

&lt;표 25&gt; 사업자 지원사업 실적(2006~2007)

(단위 : 천원)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교육장학지원사업	3,512,000	2,475,000
지역경제협력사업	3,329,000	4,387,000
주변환경개선사업	1,510,000	43,000
지역복지사업	1,641,000	3,046,000
지역문화진흥사업	1,006,000	940,000
기타지원사업	700,000	700,000
계	11,698,000	11,591,000

출처 : 한울원자력본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실적』

그러나 8차에 걸쳐 발지법이 개정됐지만 이에 대한 지역민들과 지자체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먼저 발지법에 규정한 ‘원전주변지역 범위[5km 이내]’에 대한 갈등이 두드러진다. 이는 원전 안전성 문제와 연관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은 동일 지자체 내의 지역민들 간의 갈등과 원전에 인접한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17여 년간 원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발지법의 관행을 변경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지역 일각에서는 발지법 폐지론도 대두되고 있다.

세 번째는 원전 건설·운영으로 유입된 인력과 그 가족들이 유발하는 소비경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원전건설 기간에는 운영 기간과 비교해 건설인력이 월등하게 유입됨으로 이들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소비 경제량은 매우 컸다.

우선 원전 2기를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건설인력은 1일 평균 6,700명, 연간 200만 명으로 집계된다. 원자력발전소 2기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5~6년으로 고려할 때, 이에 투입되는 인력은 1,200만 명 규모이다. 따라서 원전 6기를 건설하는 데는 연인원 3,600만 명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또 이 기간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중 한수원[당시 한전]의 경우, 건설이 시작되는 1981년과 1982년도에는 1일 100여 명 수준이었으나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는 1984년부터는 지속해서 늘어나, 86년 무렵에는 360여 명 규모로 늘어났다.

또 원자로 건물 주 시공자인 동아건설, 한국중공업 등 협력업체의 경우, 건설 기간인 6년 동안 연인원 298,738명이 투입됐다.

<표 26> 울진 원전1·2호기 건설 협력업체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동아건설(주)	관리직	2,055	3,482	4,694	7,560	8,550	7,366	5,584	4,130	1,728	45,149
	기능직	585	4,870	9,920	22,163	27,333	27,778	25,798	12,521	2,771	133,739
	계	2,640	8,352	14,614	29,723	35,883	35,144	31,382	16,651	4,499	178,888
한국중공업(주)	관리직			8	679	2,735	4,887	4,850	3,320	729	17,208
	기능직				196	7,466	29,130	35,577	18,285	905	91,559
	계			8	875	10,201	34,017	40,427	21,605	1,634	108,767
총계	관리직	2,055	3,482	4,702	8,239	11,285	12,259	10,434	7,450	2,457	62,363
	기능직	585	4,870	9,920	22,359	34,799	56,908	61,375	30,806	3,676	225,298
	합계	2,640	8,352	14,622	30,598	46,084	69,161	71,809	38,256	6,133	287,661

구분/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한국전력기술(주)	토목 건축		6	172	446	441	293	138	61	11	1,568
	전기 계측				46	222	878	1,082	663	160	3,051
	기계 배관			8	85	497	1,329	1,439	1,053	102	4,513
	계		6	171	577	1,160	2,500	2,659	1,777	273	9,123
한국검사개발(주)		67	162	271	273	397	381	362	41	1,954	

출처 : 한수원(주), 2010,『원자력발전30년사』

또 2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발전소 기간요원은 350여 명으로 6기의 경우 1,200여 명 규모이다. 또 행정요원은 300여 명 규모이다. 곧 원전 6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이들의 가족[1가구, 3인 기준]들을 보태면 4,500여 명으로 집계된다. 또 여기에 원전 운영 하는 동안 상주하는 협력업체 인력 3,000여 명을 보태면 원전 6기 가동으로 파생되는 상주인구는 7,500여 명 규모이다.

네 번째는 원전건설과 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구매경제력을 들 수 있다. 구매력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운영의 시행처인 (주)한수원이 수행하는 것과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1988년 이후 원전 운영이 본격화되고 후속기 건설이 병행되면서 지역민에 의한 납품업체, 건설업체 등 새로운 형태의 전문직업군이 대거 등장했으며 원전 후속기 건설이 계속되면서 그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표 27> 울진 원전 공사(구매) 지역발주 현황(1996~2006)

(단위 : 억 원)

연도 발주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수원	3.3	5.6	5.6	10.5	9.3	9.7	12.5	12.9	16.8	24.5	28.1
협력사	11.4	12.3	7.5	4.9	8.3	15.0	15.9	11.0	6.1	4.8	5.1

출처 : 한수원(주), 2010,『원자력발전30년사』

위의 도표에서 확인되듯 한수원이 지역구매를 처음 시행하는 시기는 1996년도로 확인된다. 이때는 울진원전 3·4호기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던 시기이다. 곧 울진원전 1·2호기가 건설·운영되던 시기에는 지역구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1996년 무렵은 울진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앞두고 한전과 지자체 간 치열한 갈등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무렵부터 지역구매가 개시되는 배경에는 당시의 갈등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로 추정된다. 물론 원전 건설이 본격화되던 1980년대 울진지역의 경제 구조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지역구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요인 중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원전 건설·운영으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 인력 고용 창출과 이에 따른 인건비 분야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 울진원전 1·2호기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원전건설은 지역민들에게 임노동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물론 당시의 임노동 형태는 전문기술직보다는 단순노동직이 절대적이었지만, 이를 통해 울진지역, 특히 북면·죽변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임노동 수입을 올렸다. 또 1989년 울진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서 지역민들은 한수원 정규직으로, 청원경찰직으로, 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고용됐다. 이들 고용력은 후속기 건설·운영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면서 점진적으로 향상됐다.

원전 6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2007년 현재 울진원자력본부 근무자를 중심으로 울진 출신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한수원 직원 257명, 협력업체 384명이며, 일용직은 78,269명이다. 이 수치는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규모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이다.

<표 28> 울진 원전 지역 출신 인건비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수원	41.0	49.2	53.4	45.7	117.2	257.4	247.1	198.7	84.5	42.4
협력사	88.7	85.9	66.3	57.4	47.4	109.8	126.1	128	118.2	95.9
일용직	542.2	370.8	87.4	26.1	33.2	74.2	72.9	91.5	103.7	113.1
계	671.9	505.9	207.1	129.2	197.8	441.4	446.1	418.2	306.4	251.4

출처 : 울진원자력본부 기획관리부 ; 한수원(주), 2010, 『원자력발전30년사』

마지막으로 울진지역에 원전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원전을 중심으로 자영업 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원전 주변을 중심으로 각종 식당·주점·편의점 등 소비 지향적 상가가 집중화되었으며, 또 울진군 소재지인 울진읍을 중심으로 전문 브랜드점이 앞다투어 개점했다.